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2018년 5월 21일(월)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회는 산입범위 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라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 이는 4백 30만 저임금노동자가 애타게 기다리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개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 국회가 최저임금수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라는 사회적 대화에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정당 간의 정치적 흥정거리여서는 안 된다. 특히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국회의원 몇몇이 앉아 일방 처리하려는 지금의 제도 개악 추진 상황은 개탄스럽다.

어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비롯한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인상 요율 및 임금수준 논의를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아직도 각 당은 이에 대한 명시적 입장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서 다시 한 번 제안한다.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라! 범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하라!

이 같은 거듭 제안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기어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개악한다면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환경사용자위원회로 상임위 명칭을 개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그동안 그토록 강조해왔던 사회적 대화의 진정성까지 모조리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치닫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국회는 당장 결단하라.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관련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될 경우, 최저임금인상 요율 및 임금수준 논의와 함께 최저임금제도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18. 5. 21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일동

첨부1. 기자회견 사진



첨부2.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발언 요지

[마트노조 위원장 전수찬]

- 국회 시도는 재벌, 기업꼼수 합법화하고 임금삭법 통과시키겠다는 것
- 산입범위 개악 강행, 통과시킬 경우 제2의 촛불로 응징할 것
-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상여금은 삶의 활력소. 일 3-4천원 식대까지 국회에서 산입범위로 결정할 정도로, 기업들이 최임 노동자보다 어렵나?
- 산입범위 논의 즉각 중단, 최임위 논의하도록 조치하라

[청년유니온]

-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양상에 우려가 크다.
- 생활보조적 성격 큰 교통비, 숙식비까지 논의되는 건 옳지 않으며, 최저임금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
- 국회는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라.